

##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기대해 본다

김 성 철 | 동의대 기획실장

우리 나라 교육계는 21세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는 필연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다시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인 것이다.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제시되고 있는 새로운 정책들과 개혁 작업들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새로운 정책들의 성패는 우리 교육 현실의 적응 가능 여부에 달려 있다.

우리 나라 대학은 1백년의 일천한 역사에 비해 급성장을 거듭해 왔다. 물론 그 성장의 내면은 질보다는 양적인 데에 치중해 왔고, 최근 20년간 급성장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적인 팽창 속에서 질적인 성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교육개혁, 두뇌한국 21 등의 교육정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대학들은 모집 단위를 광역화하는 학부와 무시험 전형의 확대, 무전공 입학제의 도입 등을 비롯한 학생 선발 방법의 다양화, 강의평가제 확대, 연봉계약제 실시 등의 일련의 교육개혁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 대학교육의 구조적인 한계는 적성과 진로보다도 성적에 따른 신분지향적 전공 선택에서 출발하여, 졸업 후 전공과 무관한 직업을 갖는 데서 엿볼 수 있다.

대학의 학사 과정 역시 단과대학이나 전공 분야를 넘어 유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기업체나 공공기관의 취업시험 역시 전공을 무시한 채 유사하게 출제하고 있어 몰개성의 교육풍토를 유도하고 있다. 또, 대학의 학점도 유사한 답을 요구하는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 전공을 불문하고 별도의 유사한 공부를 해야만 취업이 가능한 현실에 있다. 이제 기존의 성적 위주의 입시 제도나 획일화된 국가고시 제도를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수용적인 교육 현실은 기존의 질서를 답습해 온 교육사에서 문제 접근을 해야 한다. 옛날의 과거 제도나 오늘의 입시 제도는 역사적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일정한 기준의 변별력에 의한 오늘날의 입시 제도 역시 공정성은 담보하지만 상대적으로 창의성은 무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교육비를 뛰어넘는 GNP 6.5%에 달하는 28조 4천 억원의 우리 나라 사교육비를 두고, 국민들의 교육열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저력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교육 예산과 합하면 50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우리 나라의 교육 현실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지적들이 많다. 교육 투자에 대한 결과가 경제적인 측면

이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부가가치로 재 생산되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는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현실을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교육방향은 기존의 수용적인 교육을 탈피하고, 창조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달려 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은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요즘 각종 교육개혁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향이 곧 이것임을 우리는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각종 교육개혁 정책과 대학의 자구 노력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교육이 신분 상승의 구실이 아닌 창조적인 인성을 기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때 밝은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정책의 한 예로, 정부에서 신설하기로 한 교육부장관이 의장이 되고 12개의 관련 부처 장관급이 참가하는 '인적자원개발조정회의' 를 들 수 있다. 이 회의의 역할은 정보화 시대에 맞는 교육정책을 포함한 인력 개발에 관한 종합 대책을 세우고,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제도적인 교육기관의 수동적인 교육에서 탄력적인 인력개발 차원의 능동적인 정책 전환으로의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인적자원개발조정회의' 의 참신한 정책으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큰 성과를 기대해 본다.

정부의 새 시대 인재 양성 정책과 함께 전국 대학들은 나름대로 비상 상태에 돌입해 있다. '99학년도에 지방 사립대학들을 위주로 171개 대학이 7천 975명의 신입생을

신발하지 못했다. 이러한 변화 추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어 2003년도에는 현 정원의 동결 기준으로 대입 정원 72만 5천명에 고졸졸업생 64만 5천명으로 8만 여명의 절대 정원이 미달될 전망이다.

현실적인 위기 의식과 미래지향적인 지식기반 사회 대비는 필요성에 의한 전국 대학들의 변화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기도 하지만 창의적인 교육환경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들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교육은 특정 기관의 정책적 의지만으로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과 가정과 사회, 인재의 실수요자인 기업의 관심,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식 전환 등 사회 전체가 맞물려 변화될 때 가능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교육환경 변화의 가능성은 점차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21세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바람으로 일고 있는 교육환경의 변화를 통해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기대해 본다. **김성철**

#### 김성철

부산대 이학석사, 경상대 이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고, 동의대 기초과 학연연구소장, 연구처장, 교무처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동의대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기획실장으로 활동하고 있다.